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법률 위반”

광주시의회·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토론회... 원자력안전법 위반 지적 중대사고 평가·대안 검토·주민 보호대책 빠져... 안전 방기 비판 목소리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원자력 안전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했던 영광군 등 지자체들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공람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안에 중대사고 평가와 대안 검토가 빠져있으며 주민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작한다면 지자체가 법률적 검토도 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지난해 12월 20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와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법회의 위원장이 나섰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 변호사는 초안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원자력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르면 방

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은 동일부지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된 방사선영향 평가 시에 적용한 기술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동일 부지에서 적용된 방사선 영향평가 시기는 2001년 9월로, 최신 기술기준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원자로 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상위법에 위반된 것으로 봤다. 또 중대사고평가와 대안 검토가 빠져있는 점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시 평가 대상 원전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가정하고 가상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방출, 이동, 침적과 피폭, 사회경제적 피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을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중대사고 평가와 대안 검토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는 주민보호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계획의 개요와 조직개요, 보호조치와

통보, 행동요령, 대피 및 소개 등이 담긴 주민보호 활동개요, 환경감시계획 등의 주민보호대책이 빠진 것은 결국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영광 한빛1·2호기 사건·사고와 수명연장 대응'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김 위원장은 한수원의 이번 초안은 '일반인' 집단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합리적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주민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용도가 아닌 주민들 눈속임용이라는 것이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 요건)에 따르면 '전문용어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이라는 부록 내용이 있지만 초안 검토 결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대다수라는 것이 김위원장의 분석결과다.

법령전문이나 프로그램 해설이 필요함에도 용어의 해설편에 수록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위원장은 "2019년 6월 21일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한수원이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준용해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서구·북구, 3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

광주시 북구와 서구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30일 북구와 서구에 따르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역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북구는 지난 2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성과와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계획의 충실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올해 장애인 거점 평생교육기관 4 곳을 운영하고,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반대비체육센터 체육활동 프로그램, 장애인 가족 명상 힐링

등 19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해 장애인의 다양한 평생학습권이 보장되는 인권 기반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구는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거점으로 서구지역 16개 주간보호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가 두드러졌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장애 친화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서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무장애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센터별 '장애인 스포츠스태킹'을 신규 개설·운영, 성과공유회 개최 등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보험료 지원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를 당하면 조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동구의회 의원이 '광주시 동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으로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애인용 이동

기이다.

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보장구는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 폭이 좁거나 적지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번 조례발안에는 보험 가입의 대상과 납부, 보장기준 등이 명시돼 있어 사고발생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북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광주시 북구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한다.

30일 북구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2024년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건강검진비, 학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24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이다.

지원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별로 금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가 주소지 동행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오는 2월 중 적격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교육지원과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 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단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빈짝빈짝 겨울 입석대 병풍처럼 솟은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입석대)에 사흘간 내린 눈이 쌓여 아름다운 설경을 이루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조진상(사진) 동신대 명예교수가 (사)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선출됐다.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2024 정기총회'에서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를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조진상 신임 공동의장은 최충현, 박미경, 이철갑 공동의장과 함께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조진상 공동의장은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했으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

동 의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광주전남지회장 등을 역임했고, 광주지역 도시공원 지키기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과 여러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다.

이날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김희련 회원, 박지연 회원을, 사무처를 총괄할 사무처장에는 김종필 생태도시국장을 선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을 대표하는 60여명의 운영회원과 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회원의 참여 활성화, 조직 및 정책역량 강화, 주요 환경의제 대응을 위한 전국 및 지역 연대에도 주력한다는 기조를 확정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과 탈핵, 영산강 재자연화, 안전한 생활환경, 도시생물다양성 확대, 자원순환 사업들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단인 기자 kdi@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